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071 |
|----------|------|

발의연월일 : 2024. 6. 27.

발 의 자 : 서삼석 · 박희승 · 임호선
윤준병 · 양부남 · 송옥주
복기왕 · 이병진 · 박수현
위성곤 · 박지원 · 정준호
문대림 · 정진욱 · 김영진
김문수 · 안도걸 · 조계원
이원택 · 소병훈 · 이개호
의원(21인)

제안이유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216개가 소멸고위험단계로 높아짐.

이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 확충 및 인구유출 완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출산

장려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함.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통 및 보건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이 유출하고 있음.

이에 출산 및 보건, 교육, 교통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을 수립 시 출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 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는 응급실·내과·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7항 신설).

다.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중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건조·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라.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자녀의 학비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

택 우선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환경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제6조제2항제1호 중 “인구이동 변화 등에”를 “인구이동 변화, 출산 권장 등에”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인구이동 변화 등에”를 “인구이동 변화, 출산 권장 등에”로 한다.

제2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가는 지역별 보건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응급실·내과·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운영에 필요한 의료시설 및 장비
2. 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
3. 병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항

제2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운법」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건조·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출산 권장을 위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권장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에게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진학 할 경우 출생 순서 구분 없이 해당 자녀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만큼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인구소멸지역 등의 특수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3. 통학을 위한 조치
 4. 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확보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및 인건비 지원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원의 규모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군·구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하는 시·군·구기본계획 및 시·도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략) ② 제6조에 따른 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따른 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에 따른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 7. (생략) <u><신설></u>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략) ② 시·군·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u>인구이동 변화 등에</u> 관한 사항 2. ~ 9. (생략) |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 <u>인구이동 변화, 출산 권장 등에</u> ----- 2. ~ 9. (현행과 같음) |

③ ~ ⑦ (생략)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생략)

② 시·도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의 인구증감 및 인구구조, 인구이동 변화 등에 관한 사항

2. ~ 8. (생략)

③ ~ ⑦ (생략)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신설>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인구이동 변화, 출산 권장 등에-----

2. ~ 8.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3조(의료기반의 확충)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가는 지역별 보건의료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국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에 소재한 의료기관 중 응급실·내과·분만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

구감소지역 내 주민에게 양육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자녀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에 진학할 경우 출생 순서 구분 없이 해당 자녀의 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이 제24조제2항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 개선을 위한 지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만큼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가구의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

2. 인구소멸지역 등의 특수사정
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
3. 통학을 위한 조치
4. 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확보
5.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및
인건비 지원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원
의 규모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